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유럽의 반전 운동

3, 11면

알렉스 칼리니코스의
질베르 아슈카르 반박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론과
우크라이나 전쟁 4~5면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8, 9, 10면

프랑스 대선
친푸틴 전력으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극우 12면



북한 ICBM 발사: 배경과 전망

6~7면

러시아군 고전에도 나토군 추가배치? 확전으로 향하는 논리가 작용한다

관련 기사 3, 4, 5, 11면

문재인-윤석열 회동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도 타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월 28일 저녁 문재인과 윤석열이 회동을 했다. 대선 후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는 데 19일이나 걸린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애초 16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회동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됐다. 문재인은 한국은행 총재를 일방 선임해 버렸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로 갈등이 더 커졌다.

인사권이 중요한 것은 정권 초 논공행상을 위해 자기들 사람으로 진용을 짜려 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내에서 민주당 지지 세력이 늘어서 더 그렇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경제를 회복해 성장시켜야 하는데, 경제 상황과 안보 문제가 갈수록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과 군과 더 밀착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재결집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야 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6일 토요일에 벌써 윤석열 지지·반대 집회가 도심에서 경쟁적으로 열렸다.

정치 불안정

윤석열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통령 취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문재인의 인사권 고집에 대해서는 ‘집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집수리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인수위는 윤석열의 검찰 공약을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비판한 것을 꼬투리 삼아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해 버렸다. 공수처 업무보고도 미뤄 버렸다. 이 신경전들은 검찰 장악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파도 결집해 윤석열을 지원했다. 결정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 간부를 지낸 육군 고위 장성 출신자들이 대거 집무실 이전 문제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감사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식



지방선거를 앞둔 살바 싸움이 벌어졌지만, 지배계급은 권력 교체기 갈등을 우려한다. 28일 회동 모습

인 감사위원 두 자리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에게 압박이 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갈등”이 불필요한 정치 불안정을 낳고 있다는 지배계급 내 우려가 강하게 전달된 듯하다. 특히, 방역 대실패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악화시킨 경제 불안과 유가·식품 등 생필품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북한의 ICBM 발사 등이 동시다발로 터지는 상황에 대한 지배계급의 우려가 크다.

윤석열이 후보였을 때 분명한 친미와 강경 반복 기조를 표방했다가 당선 이후에 현실적으로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당장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대북 적대론 부추기는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 때문이다.

난관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은 (당선자 집무실이 있는) 경복궁 옆 인수위 사무

실 앞에서 연일 새 정부에 요구안을 내놓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막상 아주 근소한 차로 윤석열이 이겼기 때문에 변화 염원층의 실의가 크지 않은 점, 조직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매우 사기가 높지는 않아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이다. 특히, 청년층의 높은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유동성이 대선 투표에서도 확인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대외 불안정과 공식 정치 분열에 따른 정치 불안정, 생활고 위기의 교차는 대중적 저항을 자극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난데없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난한 배경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3월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 시위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난관을 의식해서 윤석열은 27일 인수위 회의에서 “실용”을 강조했다. 이윤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필수적이지 각종 개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 인수위 안에선 장애인 단체와의 만남, 한국노총과의 만남 필요성 얘기가 흘러나왔다. 물론 이는 우파적 본색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이기도 하다.

또한 윤석열은 25일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북한 ICBM 발사 후에도 강력한 대응 촉구 논평만 냈다. 문재인 청와대의 대응 수준도 충분히 호전적이었던 데다 당장은 미국도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을 증폭시킬 의지는 없기 때문이다.

중재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 김부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취임 전에 마무리하는 데 행정부가 협조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면서 문-윤 회동이 성사됐다.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 조율이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민감한 인사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문재인 측의 입장에는 윤석열 판적 폐 청산이 불안 요인이라면, 윤석열 측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에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박근혜 모두 정권 초기 내각 임명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한 달 동안 (국무총리 후보를 포함해) 내각의 장 자리를 절반 정도밖에 임명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리들이 드러나 낙마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중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선명하게 수호하려고 등장한 우파 정부에게 난관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챙기려고 개혁 염원을 눈곱만큼만 대변하려 할 것이다.

김문성

바이든은 러시아의 정권 교체가 전쟁의 목표라고 실토하다

찰리 김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연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토의 확전 모두에 반대하는 것이 왜 사활적인지를 뚜렷이 보여 준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러시아 정권 교체와 몇 년에 걸친 전쟁을 선포한 것은 가뜩이나 무시무시하게 위험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자, 또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다.

바이든은 3월 26일 폴란드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바이든의 말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혁명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수장이 누가 될지 혹은 될 수 없는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군사력에 기댄 미국의 오만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러시아가 패배하면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힘과 나토군에 완전히 종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로써 훨씬 분명해졌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음을 멈출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든 간에 푸틴이 권좌에 남는 한 바이든이 보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악몽 같은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이를 분명히 했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이 전투에서 며칠, 혹은 몇 달 안에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이 싸움에 매진해야 한다. 대가가 따를 것이지만, 이는 우리가 치러야만 하는 대가다.”

바이든은 푸틴을 끌어내릴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전쟁광 3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바이든

우크라이나와 다른 모든 곳에서 피로 대가를 치르고 삶이 파탄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다. 바이든의 연설은 갈등이 빠르고 심각하게 고조될 것임을, 푸틴이 권좌에 있는 한 무시무시한 충돌이 계속될 것임을 뜻한다.

백악관은 즉시 바이든의 발언을 “명확히 하”려 들었다. 바이든의 연설이 공식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설은 지난주 벌어진 맹렬한 확전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바이든의 “실언”은 이전까지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들에 가려져 있던 것을 대놓고 끄집어낸 것이다.

바이든의 노골적인 발언에 동맹들은 당황했고 측근들은 패닉에 빠졌다. 3월 27일에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러시아의 정권을 교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전략은 없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조셉 보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심지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실도 바이든의 발언과 선을 그었다.

바이든이 실수한 것이다. 바이든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만 공유했어야 했을 견해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이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 즉 러시아의 침공은 끔찍하지만 미국 역시 살인마 깡패라는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은 이 연설로 유럽 순방 일정을 끝냈다. 바이든은 이번에 나토·G7·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폴란드 동부의 미군 기지를 방문했다. 그 결과,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수만 대군이 주둔한 나토 “동쪽 방면”의 군사화가 심화됐다.

3월 26일 영국 국방장관은, 나토의 흑해 지역 “공중 감시 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루마니아에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지도자들은 나토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것이 “제3차세계대전”을 뜻하는 일이라고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말했는데도 말이다. 우크라이나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러시아 공군에 공격을 퍼붓게 될 텐데도 말이다. 이는 핵무장 국가들 간 직접 전쟁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나토를 이용해 29개국을 미군에 계속 묶어두려 하는 한편, 경제적 연결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으로 액화 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3월 25일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2030년까지 매년 500억 세제곱미터의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고자 한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약 3분의 1을 벌충할 것이다. 또 이는 유럽연합이 지난해에 수입한 것의 곱절 이상인데, 지난해 수입량 자체가 이미 기록적 수치였다.

미국은 제재 수위도 높이고 있다. 바이든의 유럽 순방 동안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3국에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의 개인·기업들로 금융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제재로 이미 가난한 사람들 수억 명에 타격을 입히는 식품 가격 급등 및 식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십만 명이 마리우폴시(市)에 갇혀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사람들은 몇 주에 걸친 러시아군의 공격에 시달려 왔다.

러시아의 침공, 나토, 모든 제국주의자들의 유혈낭자한 행보에 반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8호 / 번역 김준호

주류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그 서방 후원국들이 대표 행세를 하는 '민주주의' 대(對)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같은 '권위주의' 간의 쟁투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단순화다.

예컨대, 우크라이나를 십중팔구 가장 열렬히 지원하는 것은 폴란드의 극우 정부다. 폴란드 정부는 권위주의 경향 때문에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고 있다. 푸틴은 인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인도 정부 자체는 야만적인 파시스트 정부이지만 인도는 여전히 다당제 민주주의의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룰 때 주류 미디어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이 결집한 서방 블록이 “국제 사회”인 양 말한다. 이런 말은 또, 서방에 대항하는 세력이 ‘권위주의’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권위주의’ 문제는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살인마 전제 왕가를 다룰 때는 편리하게도 잊혀진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해할 더 나은 이론적 분석틀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제국주의론이다. 푸틴이,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진 차르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듯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가 역사의 시대 구분을 뛰어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저 강대국이 이웃 사회를 지배·정복·차취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일은 분명 수천 년 동안 계급 사회의 특징이었고, 고대 페르시아·중국·로마 제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러시아는 분명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두들겨 굴복시키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분할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 전쟁을 이렇게만 이해해도 될까?

레바논 마르크스주의자 질베르 아슈카르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슈카르는 스스로 “급진적 반제국주의 입장”이라고 부르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오직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사이의 쟁투에만 초점을 맞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에 성공하면, 세계가 식민지로 새로이 나뉘고 지구적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금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게끔 부추길 것이다. 반면 러시아가 실패하면 —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한 것에 더해 — 미국 지배자들이 ‘베트남 전쟁 실패드롬’이라 부르는 것을 강화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승리하면, 나토 회



질베르 아슈카르를 반박함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둘러싼 논쟁

제국주의론이 없으면,
국민국가들 사이의 쟁투만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역할을 이해하면
전쟁을 둘러싸고 작용하는
계급 적대를 포착할 수 있다.

원국들에서 전쟁광들이 상당히 세를 얻고 군비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할 책임은 내가 보기에 꽤나 명백하고, 벌써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패배는 우리가 일반적 군축과 나토 해체를 요구하며 투쟁할 여건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인들이 정말로 러시아 침략군을 몰아낼 수 있다면 실제로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미국과 나토가 약해질 것이라는 아슈카르의 주장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무기 지원을 쏟아붓고, 자신들의 군비를 한껏 늘리고 있다.

만약 이런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들의 용기 덕에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비를 축소하고 나토를 해체하는 것으로 반응할까? 그럴 리 없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로 찬양할 것이고, 나토를 더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주도권에 대한 진정한 도전자인 중국을 상대로 한 세계사적 경쟁에서 더 큰 활력과 원기를 얻을 것이다.

아슈카르의 관점이나, 나토 문제를 회피하는 폴 메이슨 같은 다른 좌파 인사들의 관점에서 빠져있는 것은 제국주의론을 이해할 때 역사적 특수성에 더 주목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1860년대에 쓴 《자본론》에서 이 이론이 처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제1차세계대전 시기인 20세기 초에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현실에 직면했다. 급진 자유주의 경제학자 J A 홉슨은 이렇게 썼다. “최근 제국주의의 새 특징은 … 무엇보다 여러 국가가 제국주의를 택했다는 것이다. 경쟁하는 여러 제국들이라는 개념이야말로 본질적으로 현대적이다.”

당시의 지정학적 경쟁은 영토를 둘러싼 각종 충돌(대국들이 식민지와 반(半)식민지의 지배권을 다투는 것)과 군비 경쟁 가속화로 나타났다. 이런 충돌과 경쟁이 1914~1918년과 1939~1945년 양차 세계대전을 촉발해 세계를 피로 물들였고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은 바로 그런 충돌과 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했다.

마르크스 제국주의론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러시아 혁명이 블라디미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불렀다. 레닌의 동지인 폴란드계 독일인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썼다. “제국주의의 정수는 자본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고, 그 새 영역을 두고 서로 경제적·정치적 쟁투를 벌이며 경쟁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특징은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서로 맞물리는 것이다. 경제적 경쟁은 자본주의의 원동력인데,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에 투자하며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19세기 말에는 국가간 지정학적 경쟁이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 논리로 통합됐다.

이는 전쟁과 자본주의 모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대군 운용에 필요한 무기, 보급품, 수송 수단의 대량 생산이 군사력을 좌우하면서 전쟁이 산업화했다. 따라서 국가들은 산업 자본주의를 촉진시켜야 했다.

한편, 자본주의 기업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때 국가에 의존했다. 19세기 말 불황기 동안 자국의 해외 식민지 획득이 기업 이익의 상대적 감소를 별충해줬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그저 대국이 상대적 약소국을 괴롭히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일이 술하게 수반되지만 말이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자본들과 그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세계 체제다. 제1차세계대전 직전과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제국주의도 세계적 경제 통합을 배경으로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동반한다.

서로 적대하는 강대국들의 권력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에 달려 있다. 미국은 금융과 첨단기술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고, 중국은 방대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에 기댄다. 오늘날 선두에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여섯 국가를 꼽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 간 제국주의 전쟁이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적대는 미·중 갈등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일차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자신의 주도권으로 대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주의가 자기 세력을 재건하려 책략을 구사하면서 충돌이 세 갈래로 빚어지고 있다.

서유럽 강대국들은 상이한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받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 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중국의 방대한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결국 미국과 한편에 선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이처럼 국가간 경쟁 체제를 포함한다는 인식이 아슈카르의 분석에서는 완전히 누락돼 있다.

아슈카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충돌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

“경쟁하는 제국주의가 전쟁하는 당사자를 각각 지원한다고 해서 그 전쟁을 제국주의간 전쟁이라 부른다면, 이 시대의 모든 전쟁이 제국주의간 전쟁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제국주의 중 한 쪽이 전쟁의 한 편을 지원하면 상대방 제국주의가 다른 편을 지원하리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간 전쟁이란 그런 것이 아니

다. 두 강대국들이 대리전이 아니라 직접 전쟁을 벌이면서 상대의 영토와 (신) 식민지를 침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1979년 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려 하자 미국은 소련을 상대로 한 대리전에 나섰다. 미국은 영국·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 등 동맹국들과 함께 소련 점령에 맞서는 이슬람 전사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 전쟁은 냉전의 마지막 10년 동안 소련의 [인적·물적·역재] 자원을 소모하고 소련군의 사기를 꺾는 데에 일조했다.

물론, 이슬람 전사들에게는 나름의 고유한 정치적 어젠다가 있었다. 그 어젠다는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분명해졌다. 특히,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뉴욕과 워싱턴 DC에 대한 [2001년] 9·11 공격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저항한 것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냉전의 종막이자 중요했던 국면에서 분명 미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 방위 전쟁을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간 쟁투와 국민 방위 전쟁은 종종 서로 얽힌다. 제1차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암살의 책임을 물어 세르비아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지했고, 이는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케 하면서, 끔찍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빚었다.

독일 마르크스주의자 카를 카우츠키는 세르비아의 민족 자결권 투쟁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 충돌을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이렇게 응수했다. “지금 참전자의 1퍼센트밖에 안 되는 세르비아에게 이 전쟁은 부르주아적 해방 운동의 ‘정치적 연속일 것이다.

“나머지 99퍼센트에게 이 전쟁은 제국주의 정치의 연속이다.”

물론 현재의 사례는 당시와 세력 균형이 다르다. 직접적 교전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토 열강이 교전에서 빠져 있으려 애쓰다 해서 — 무엇보다 러시아와의 핵전쟁을 피하려고 — 그들이 핵전쟁만을 제외한 갖은 수를 동원해 러시아를 패배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바로 “제국주의 정치의 연속”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론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제국주의론이 없으면, 국민국가들 사이의 쟁투만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역할을 이해하면 전쟁을 둘러싸고 작용하는 계급 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계급적 이해관계는 푸틴의 전쟁에서 죽어가는 러시아 징집병들과 후방에 있는 그 가족들(서방 제재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는)만을 이어 주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노동계급 사람들도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로 이어져 있다. 전쟁 탓에 폭등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 받고 핵무기 재앙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 모두는 서로 경쟁하는 지배계급들이 이 끔찍한 전쟁을 부추기는 것에 맞서 단결하는 것에 계급적 이해관계가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호 / 번역 김준호



북한 ICBM 발사: 배경과 전망

대륙간탄도미사일

김영익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때보다 이번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간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

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파기했다며 즉각 규탄 입장을 냈다. 윤석열 인수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정의당·사회진보연대 등 일부 좌파도 북한을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발사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은 채 선제적으로 북미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했다는 설명은 상황을 일면적으로 그리는 것이다. 현 상황은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긴장이 다시 쌓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다란 불안정을 자아내고 있다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북한의 일방적 도발인가?

앞서 2018년 북한 당국은 북·미/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북·미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등 군사적 압박과 제재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내린 조치였다.

그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 선언에는 한국 같은 돈 많은 동맹국들이 안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평소 소신이 많이 작용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지금까지 제재를 완화하지도, 한미연합훈련 등의 군사 압박 강도를 낮추지도 않았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대북 제재를 꾸준히 강화했다.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면서 북한은 일부 제재라도 완화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면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문 한 장 없이 끝났다.

트럼프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디어 앞에서 김정은과의 우정을 과시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실제 행동은 매우 달랐던 것이다.

한미 공동훈련은 꾸준히 진행됐고 중국까지 염두에 둔 국외 연합 훈련도 증가했다. 미국 유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격노》에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바이든 집권 후 북·미 관계는 어땠는가?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향해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도 대화의 문을 닫은 쪽은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그런 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지난해 7월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 하지만 많이는 아니고 약간.” 오바마 정부 때처럼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는 아니지만 “약간의 인내”는



북한 당국이 공개한 3월 24일 ICBM 발사 장면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가 비판하듯이, 이는 결국 “웬만하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배 관료에게 “현상 유지”는 북한 경제를 옥죄는 대북 제재와 자신들을 위협하는 군사 압박의 지속을 의미한다.

2021년 11월 미군과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등 전투기 10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미 해군 특수전부대(네이비실)의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일명 ‘참수작전’) 훈련 모습도 보란 듯이 공개했다. 올해 4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예고돼 있다.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향해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그런 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얽히는 아시아 불안정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제국주의 강대국 간 갈등이 악화돼 아시아에서 긴장이 높아져 온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미·중 갈등이 점증해 온 결과,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양국이 대만해협에서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자주 벌이며 상대방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갈등과 긴장은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서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군비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쓰고 있다.

한편, 일본은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항공모함 도입을 준비하

는 등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비롯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으로 불안정이 커지는 상황은 북한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만해협 등지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우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만 주변의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대한 무력”이 북한을 겨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북한 외무성 부상 박명호는 이렇게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조선반도의 위태로운 정세 긴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아의 불안정을 더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러시아 제재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게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으러대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이 전쟁은 미·중 갈등

과 더한층 얽힐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며칠 후에 대만에 비공식 대표단을 보내어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에 대비해 유명무실화된 징병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총리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나토처럼 일본이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랜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를 버리고,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내놓고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핵 공유’ 논의는 중국·러시아만이 아니라 북한도 엄청 자극하는 일이다. 한국 지배자들도 미·일 간 핵공유에서 배제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자아낸 불안정이 향후 엄청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린 배경이다.



3월 25일 한국 공군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

과방출
사진

북한은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냉전 해체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압박해 온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에 늘 얽혀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악마화하고 이를 명분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 배치를 정당화했다. 그만큼 한반도 불안정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이 얽히고설켜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북한 지배 관료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고립된 북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선택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겼을 것이다. 또, 북한 지배 관료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카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보면서,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를 더 강력하게 개발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미국 등의 강대국에게서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간 경쟁의 장기작 신세다.

일부 좌파는 북한의 핵무기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실현할(불가피한) 수단으로 여긴다.

물론 핵무기가 전쟁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위협’을 부풀려 자신들의 전략을 관철시켜 왔다. 그리고 그것이 불안정을 키워 온 것이다. 또, 북한 핵무기는 노동계급의 반제국주의 국제 연대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원인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정부는 즉각 ‘현무-II’ 지대지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25일에는 F-35A 2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유사시를 상정해 최대 무장을 한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훈련이다.

F-35A는 윤석열이 대선 때 부르짖은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에 동원될 중요한 전략 무기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첨단 무기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윤석열 인수위도 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북한에 단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이미 상당히 호전적인데 말이다.

윤석열이 취임 직후 곧장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에는 신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경 우파가 정권 핵심부로 돌아온다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 그들이 현 정부보다 더한층 대결적인 자세로 상황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등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강경해질 미국의 태도도 새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 가져갔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서였다.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미국의 제재 강화 시도에 순순히 협력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한 4개국의 하나다. 중국도 2017년 한반도 위기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더한층 악화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했고, 유엔 안보리 이후 동의하는 국가들을 별도로 모아 대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한반도에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일 공산이 크다. 거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도 투입될 수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무력시위와 제재 강화는, 지금껏 그래 왔듯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은(ICBM 발사 기술과 직결된)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한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군비를 증강하는 데도 반대해야 한다.

이 글은 3월 26일에 쓴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3월 24일 노동자연
대 온라인 토론회(우측
QR코드)의 발제문이다.



2월 초 배구선수 김인혁 씨와 27살의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잼미 씨가 악플과 온라인 괴롭힘으로 잇따라 목숨을 끊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이버 렉카는 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논란과 이슈가 발생하면 거기에 재빨리 달려들어 짜깁기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특정 연예인이나 유튜버, 심지어 참사 유가족의 사생활을 캐거나 집요하게 공격해서 논란을 일으키는데, 위의 경우가 그 피해 사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벌어지는 이런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성 청년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사이버 렉카나 일베, 디씨인사이드 등 남초 커뮤니티에 빠져 보수주의와 안티 페미니즘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와 대중 문화 탓에 청년층이 보수화된다는 주장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령 2003년 홍세화 씨는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확산 때문에 대학생이 보수화됐으며 <한겨레>에 '그대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이라는 칼럼을 실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 2013년 대선에서 박근혜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자, 당시 좌파의 일각에선 일베 사이트의 성장을 청년층 보수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바로 그 '무식한', '보수화된' 20대 청년들이 그런 매도나 재단의 대상이 된 지 얼마 안 돼,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운동의 주축이 됐고,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대거 나섰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형태를 달리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최신 버전은 이렇다. "청년들은 여가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유튜브를 통해



보다 미디어를 장악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열쇠라고 본다.

일부 좌파들도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그래서 대중을 '우매하게 만드는' 언론을 개혁하는 것이 대중 의식과 사회를 개혁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거나, 때로는 미디어상의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많은 미디어들이 보수적 편견을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런 미디어들이 대중의 의식을 좌우할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미디어가 대중을 체제에 순응시키고 보수적 편견을 퍼뜨리므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미디어가 하는 구실을 알기 위해 먼저, 그것을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그것이 대중의 의식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만큼 되는지 보고자 한다.

정치 일반에 대한 피상적 인상을 쌓는다. ... 렉카를 통해 시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슈의 경중과 그 해석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없다."(<급진적 20대: K-포퓰리즘 — 가장 위태로운 세대의》중에서)

주입?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아주 흔하다. 미디어가 그 열독자나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낙후한 관념을 주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경우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견해만 거듭 제공돼, 편향과 편견을 주입하는 효과가 더 강하다고도 한다.

미디어에 대한 이런 생각은 공식 정치권에서도 지배적이다. 그래서, 공식 정치 진입을 중시하는 정당은 모두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

누가 미디어를 지배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의 미디어는 대부분 기업의 일종으로, 그 지배력은 한줌의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수중에 있다.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는 매체들도 이런 점에서 실은 빅테크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뉴 미디어이다.

가령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황제라 불리는 루퍼트 머독은 52개국에서 780여 개의 미디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는 미국의 최고 유력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의 <선>, <타임즈> 등이 있다.

2013년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하면서 언론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국의 조·중·동 또한 방상훈 일가, 홍석현 일가, 김병관 일가가 지배하는 언론 대기업들이다.(문화일보도 삼성의 관심사를 충실히 반영해 왔다.)

이런 미디어 사주들은 모두 지배계급의 일원이자, 그 계급의 정치적 본능이 잘 발달한 자들이다. 그들은 기업주들과 주류 정당의 정치인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왼쪽 하단 사진)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친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기존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사상을 퍼뜨리는 데 큰 관심



자본주의 사회의 미디어는 대부분 자본가 계급이 소유하며 기존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사상을 퍼뜨린다

이 있다.

이러한 계급 배경이 자본주의 미디어가 친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이유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자본주의 사회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가령 기업 이윤이 증대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뉴스로 취

급된다.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이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치고박고 싸우는 공식 정치, 유명인의 사생활, 범죄나 스캔들에 집중하지,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노동자 투쟁을 무시하

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뭄에 콩 나듯이 이를 다룰 때조차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는 대부분 말하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지면 미디어는 자국 정부나 유력 동맹의 공식 선전 기구처럼 군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친자본주의적·친제국주의적인 편향은 단지 우파 미디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인정받는 미디어들조차 본질적으로 그렇다. 그런 신문의 데스크도 본질적으로 지배계급과 가깝고 기존 세계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가정을 공유한다.(오른쪽 하단 사진)

가령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과 노동계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한겨레21>은 “노사가 임금 인상을 절대치를 두고 싸움판을 벌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은 ‘경제’(자본주의)를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퍼트 머독: <월스트리트 저널> 등 780개 이상
THE WALL STREET JOURNAL
THE SUN



제프 베이조스: <워싱턴 포스트>
The Washington Post



방상훈: <조선일보>
朝鮮日報



홍석현: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병관: <동아일보>
동아일보

한겨레21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을 절대치를 두고 노사가 벌이는 싸움판이 돼서는 안 된다. (2021.07.05)

경향신문

노동자위원들도 최저임금의 단기적 인상에 급급하지 말아야 (2019.06.27)

한겨레

전국민 재난지원금? 돈이 남아도는가 (2021.06.07)

미디어 경쟁

물론 대부분의 미디어가 친자본주의적 편향이라고 해서 각각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슈별 논조가 두루 단일한 것은 아니다. 미디어가 단일하지 않은 것은 지배계급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매우 자주 내부에 분열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령 <조선일보>는 국민의힘과 가깝고 <한겨레>는 민주당과 가깝거나, 미국의 폭스 뉴스는 공화당에 가깝고 할리우드드는 민주당과 가까운 식이다.

그러나 혈맹처럼 보이는 이런 관계에

도 때때로 균열이 일어난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일어나기 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최순실 관련 보도를 가장 먼저 한 것은 TV조선이었다. 그 전까지 박근혜를 떠받들던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지배 정당성이 추락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제는 치고받는 데 여념이 없었다.

2003년 영국의 <데일리 미러>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던 것은 당시에 잘 알려진

사례였다. <데일리 미러>는 영국의 대표적 언론 대기업이고 노동당 친화적인 신문이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총리의 당시 노동당 정부가 지지하며 참전한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것은 영국 지배계급의 분열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전례없이 크게 일어난 반전 운동의 영향이었다.

미디어들의 기존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미디어들이 서로 독자 확보 경쟁을 해서 광고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자기 미디어를 시청하고 읽을 대중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미디어가 특정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 자국 정부가 참전하는 전쟁 등에 대해 때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도 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지배계급은 주요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미디어도 대중의 의식을 온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

미디어의 영향력, 얼마만큼인가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상적 시기에 미디어의 영향력은 크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지배자들은 미디어와 인터넷을 어떻게든 더 통제하고 싶어 한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정보와 뉴스를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게나마 얻는 중요한 통로이다.

사람들이 매일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보고 읽은 것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디어가 대중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주입' 이론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5~46년 집필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어떤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의 물질적 수단을 지배하는 계급이 정신적 수단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 규약 전문(前文) 등에서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이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른쪽 상단 사진)

만약 사람들이 지배적 사상을 그대로 주입받아 수용하기만 한다면 이런 일(자력 해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은 그저 미디어가 주입하는 대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의식은 현실에서 그들이 얻는 경험들(인생 경험, 조직 경험, 투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상식이나 미디어 속 주장이 스스로의 경험과 충돌할 때 미디어의 주장을 나름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비판적 의식도 갖게 된다.

미디어를 보고 읽는 사람들의 다수도 노동계급 구성원이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과 자본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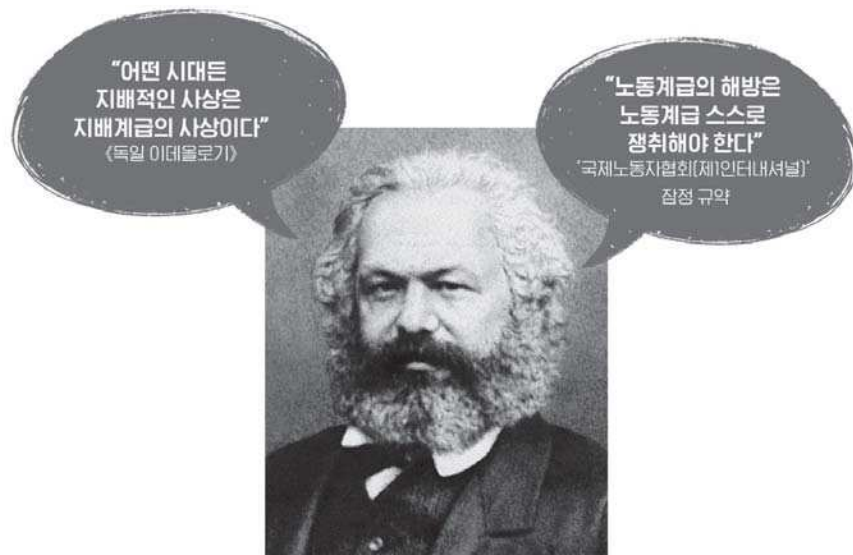
바로 그 간극이 노동자 대중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절반만 받아들이거나 마침내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젖힐 수 있다.

가령 대부분의 미디어는 이주 노동자나 난민, 조선족을 빌붙는 집단이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 교류해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디어가 '심는' 편견이 금세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나 파업에 참가하게 되면 미디어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거짓말도 버젓이 하는지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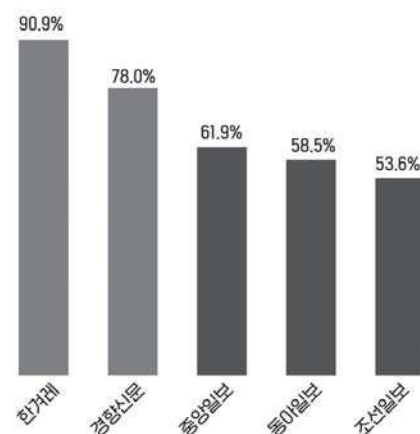
투쟁이 커져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보수적인 미디어의 열성 독자들조차 이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수십년 구독한 미디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가령 조·중·동 독자의 50~60퍼센트가 2008년 촛불 시위 때 그 시위를 지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시사인> 2018년 6월 21일자, 오른쪽 표)

이는 촛불 시위를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한 과격 시위라고 비난하던 그 신문들의 논조와는 다른 것이었다.



조·중·동 구독자 절반 이상 2008년 촛불 운동에 공감

지배적 사상이 강력하지만 그것이 대중 의식을 완전히 좌우하지는 못한다



역사에서 지배적 사상의 영향력을 뚫고 투쟁이 일어난 일은 거듭 있었다. 엄혹한 독재 정권 시절에 한국 언론은 대부분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었지만 대중은 반독재 민주화 항쟁에 나섰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도 미국과 한국의 유력 언론들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부시 정부의 거짓말을 보도해 뚫었지만,

대규모 전쟁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사례들은 지배적 사상이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무소불위로 대중 의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런 점을 보지 않으면 대중 의식의 변화 가능성이 갈보게 되고, 사회의 변화에도 회의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도전할까?

미디어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사람들은 언론 개혁이 사회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디어를 되도록 온전하게 통제하려 하는 지배자들의 시도에 맞서는 일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미디어가 편향된 이유는 계급으로 나뉘어 그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돼 있는 사회를 마치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이다.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차별을 이용해 대중을 이간질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여전하다면, 특정 미디어나 특정 소셜 미디어 계정을 없애도 또 다른 미디어가 그런 구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미디어가 퍼뜨리는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과 논쟁하면서, 자

본주의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

기성 미디어의 편견과 왜곡과 거짓말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은 대안적 미디어를 찾으려 할 것이다. 혁명적 미디어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배자들의 거짓과 왜곡, 비밀을 폭로하고 온전한 진실과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해야 한다. 이것은 변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 미디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체제 자체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체제에 맞서 싸우는 사

람들의 조직과 연결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분열돼 있고 그 조직이 약화돼, 노동자들이 원자화돼 있고 정치적으로 수동적일 때 미디어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을 대규모로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대중은 체제에 맞선 저항에 스스로 나섬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비로소 자신의 의식도 바꿀 수 있다. <노동자 연대> 신문과 노동자 연대TV는 바로 이런 과정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

김승주

추천 소책자



혁명적 신문

크리스 하먼 지음, 정진호 옮김.
노동자연대, 88쪽, 3,5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폴란드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 침공과 나토 확전을 반대하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폴란드 '노동자 민주주의' 활동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에 두 가지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 난민이 대거 유입됐다. 둘째, 군비 증강(모든 의회 정당들이 지지했다)과 나토·서방의 확전이다.

러시아 침공의 결과로 200만 명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에 입국했다. 일부는 다른 국가로 갔지만, 다수는 아직 폴란드에 있다. 지금의 전쟁 이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인 노동자 100만~200만 명이 폴란드에 있었는데, 대부분 임금과 노동조건이 형편없었다.

공식 캠페인 “우크라이나에 연대를”도 있지만, 난민들에 대한 엄청난 연대가 쏟아졌다. NGO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난민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거나 여러 도움을 주는 등 물질적 지원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었고 혹독하게 억압당했다.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 영토였다. 우크라이나인 난민들에 대한 연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난민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면 극우가 이런 정서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폴란드의 우파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나토 가입에 매우 호의적이지만, 최근까지도 때때로 우크라이나인을 비방하는 프로파간다를 쏟아내곤 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란드의 모든 계급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현재 폴란드에 새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 다수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비공식적으로) 받는다. 우리는 폴란드인 노동자들과 우크라이나인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주장한다.

폴란드 정부의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문화 개방” 정책은 — 흑인들은 입국 심사에서 뒤로 밀리고 폴란드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한다 — 벨라루스 국경의 상황과 뚜렷이 대비된다. 정부는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



2018년 나토 훈련에서 폴란드 병력 수송차가 수송대를 이끌고 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서 비유럽계 난민들의 입국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장벽을 세우는 중이다. 현재 200명이 두 나라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국경의 폴란드 쪽에서만 난민들의 시신이 최소 20구가 발견됐다.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얼마나 많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군비 증강

한편, 폴란드 정부는 군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퍼센트까지 확대하고 군대 규모를 급절로 키우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회에서 반대표 없이 통과됐는데, [의회 안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당인 폴란드 좌파당(Razem) 소속 의원들도 찬성 투표했

다. 좌파당은 자신들의 나토 지지 입장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이끄는 유럽 좌파적 개혁주의자들의 연합 ‘유럽 민주화 운동 2025’(DiEM25)에서도 탈퇴했다. 바루파키스가 나토 철수를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련군이,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1993년까지는 러시아군이 폴란드에 주둔했었다. 오늘날 대다수 폴란드인들은 나토군이 전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지한다고 여긴다.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특히 심하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폴란드로 확전할 수 있다는 불안이 광범하다.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폴란드 의회 내 정당들에게 나토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고, 정부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집권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키예프(키이우)를 방문해, 무장한 나토군이 “평화 유지 작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다른 정당들은 확전을 낳을 이 제안에 반대했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모임을 여러 차례 열었고, 우리 단체의 월간지는 거리 판매, 3월 19일 열린 인종차별 반대, 여성 차별 반대 집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하며 열린 집회들에서는, 더 강한 제재, 더 많은 무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더 많은 것을 하라고 나토와 유럽연합에 촉구하는 구호가 주됐다. 기본적으로 이 집회들은 자유주의자들이나 친정부 우익 세력들이 조직한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연대를 주장한다. 제국주의 간 전쟁에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원칙이 뜻하는 바는, 폴란드에서는 우리가 폴란드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나토·서방의 확전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곧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을 주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호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인들에 연대를! 러시아는 침공 중단하라!
- 러시아 내 용기 있는 반전운동에 연대를!
- 우크라이나에 무장한 “평화 유지군” 투입 반대한다! 나토와 서방의 확전 반대한다!
- 모든 난민 환영한다! 인종차별 반대한다!
- 군비 증강 반대한다! 그 돈을 주택·교육·의료에 써라!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7호 번역 최병현

**제국주의 간 전쟁에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원칙이 뜻하는 바는,
폴란드에서는 우리가 폴란드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나토·서방의 확전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대선

친푸틴 전력으로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극우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2주 후인 4월 10일 치러진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마크롱이 선두(27퍼센트)를 유지하고 있고, 르펜(20퍼센트), 멜랑송(14퍼센트), 제무르(10퍼센트)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파시스트 르펜의 선전과 극우 인사 제무르의 부상이 두드러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판도가 다소 변했다.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걸으며 푸틴을 칭송해 온 르펜과 제무르의 지지율은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마크롱의 지지율은 다소 상승했다.

좌파 후보는 6명이 출마했지만 멜랑송을 제외하고 존재감이 작다. 이전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의 후보이자 현직 파리 시장인 안느 이달고는 지지율이 2퍼센트에 불과하다. 공산당 후보는 4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선 1차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좌파 표심은 멜랑송으로 모여서 멜랑송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멜랑송의 상승세에 대해 반자본주의신당(NPA)의 활동가 셀마 우마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근 멜랑송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이민자, 무슬림들의 지지와 좌파, 급진화한 청년층의 지지가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멜랑송은 타 좌파에 비해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취해서 이주민들의 지지가 높은 편이다. 최근 급부상한 미투 운동도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급진적인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물론 정치적 약점이 있다. 멜랑송은 비록 나토를 비판하며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나토와 무관하며 오로지 푸틴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열린 유세에서 멜랑송은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을 지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이 전쟁에서 나토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순된 입장일 것이다.

극우·파시스트의 위협

두 극우 후보인 르펜과 제무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승세가 꺾였지만,



3월 19일 프랑스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경찰 폭력 반대 집회

여전히 지지율 2, 4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에 단연 두드러졌던 후보는 에릭 제무르였다. 제무르는 극단적인 반이민·반이슬람 성향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제무르는 무슬림이 백인들의 유럽을 “정복”하면서 인구 “대교체”가 벌어진다는 음모론을 편다.

르펜의 참모들도 일부 이탈해 제무르 캠프에 합류했다. 일부 파시스트들이 제무르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 결집하고 있다. 제무르를 지지하며 거리에서 폭력 행동을 자행하는 집단들도 출현하고 있다.

제무르의 선전은 르펜의 주류화 전략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파시스트인 르펜은 자신의 진정한 색채를 희석시키고 비교적 온건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탈악마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전통적 극우 및 파시스트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르펜의 국민연합은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르펜은 여전히 20퍼센트에 가까운 지지율을 누리고 있다. 마크롱과

결선 투표에서 경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파시즘의 위협에 맞선 저항은 충분히 결집하고 있지 못하다. 파시즘에 맞서 광범한 운동을 결집시켜야 할 좌파의 다수는 파시즘이 제기하는 특수한 위협을 보지 않은 채, 파시즘 개념을 자본주의와 모든 국가기구, 지배계급에 광범하고 불분명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는 파시즘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려면 먼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전제 조건을 걸거나, 아니면 소위 ‘반자본주의 투쟁’(실제로는 노동조합의 경제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폭넓고 개방적인 대중 투쟁을 폄하하고 있다.

폭넓고 개방적인 대중 투쟁

한편, 2019년 프랑스를 뒤흔들며 마크롱을 괴롭힌 노란 조끼 운동 이후 3년 만에 그런 투쟁이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퍼센트에 달하

는 지난달 물가 인상율은 보통 사람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

이미 노동총동맹(CGT) 등 주요 노동조합은 임금·연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관해 혁명적 좌파 단체인 ‘계급의 독립성’의 주도적 회원이자 국제사회주의경향(IST) 활동가 자드 부하룬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선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낮고, 코로나19 이후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도 엄청나다. 그동안 노동조합들은 대선 기간 만큼은 좌파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파업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매일 수백여 일터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파리의 대중교통 노동자들은 3월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자드 부하룬 같은 혁명적 좌파는 노동자 투쟁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결합하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계급의 독립성’의 발의로 3월 19일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공동 행동에 401개 좌파 단체, 이주민 단체, 노동조합 등이 동참했다. 파리 집회는 1만 명이 넘게 모였다. 여러 도시들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계급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극우·파시스트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극우의 위협은 여전하다.

자드 부하룬 같은 혁명적 좌파가 지적하듯, 르펜 등이 파시스트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광범한 반파시즘·반인종차별 공동전선을 지역 사회와 일터에서 건설해서 극우·파시스트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부상을 저지하는 공동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

박이량



단독 보도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 측의 반인권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보호소 내에서 열악한 처우를 다룬 기사가 나간 이후, 보호소 측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난민을 표적 삼아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렀다. 보호소 측은 심지어 내부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S 씨가 하루 10여 분간 사용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실을 폭로한 이유로 보호소 당국에게서 이른바 '찍힌'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여수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S 씨에 따르면, 보호소 측은 지난달에 검사도 없이 S 씨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며 나흘간 생활치료센터로 보냈다. 그동안 보호소 측은 S 씨의 개인 소지품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이 중에는 현금, 개인 종교 서적, 난민 신청 관련 서류 등 중요한 물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16일, S 씨가 소지품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처음에는 직원 4명, 나중에는 십수 명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 “왜 한국에 왔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하며 폭언은 물론이고, 주먹으로 복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인권 침해 외국인보호소 내부 시설.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트려 짓누르는 등의 폭력까지 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고 본지가 여수보호소 측에 연락하자 직원은 “보호외국인이 소지품을 잃어버렸다고 해 경찰에 절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추가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한통속

S 씨에 따르면, 여수보호소 측은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했고, 실제로 S 씨의 신고로 경찰이 왔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S 씨가 아랍어 통역을 요구했으나 보호소 측과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경찰 측은 여수보호소에 출동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단순 절도 사건이었다며,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관련된 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S 씨에 따르면 경찰은 복도 등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소 측과 한통속인 양 같이 웃고 떠들었다고 한다.

한편,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구금 이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여수보호소 측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 보호소 측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S 씨에 따르면 각 층마다 코로나 증상을 보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구금자들이 늘고 있지만 보호소 측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S 씨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누구라도 여기에 갇히게 되면 범죄자가 될 것 같아요. 점점 사람을 혐오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갇힌 이들 모두 미쳐가고 있어요.” 하고 전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측은 지금 당장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또, 구금 이주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박이량

화성외국인보호소, 코로나 대책보다 이주민 통제 우선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에 한 달 기한으로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했던 이주민들을 재구금하겠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해당 이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 안에 수용된 이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화성보호소에서는 지난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다. 구금된 이주민 3~4명 당 1명 꼴로 확진될 정도였다.

그러자 그동안 구금자 석방에 매우 까다롭게 굴던 화성보호소 측은 마지못해 적잖은 수의 구금자를 한 달 기한으로 석방했다. 밀집도를 낮추려는 조치였다.

문제는 지난 한 달 동안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외국인보호소도 여전히 전혀 안전하지 않다. 화성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에 따르면,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3월 20일 기준 확진자가 36명이라고 한다.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밀폐된 곳에서 이뤄지는 집단 생활을 고려하면 석방자들이 다시 구금됐을 때 집단감염이 반복될 것은 뻔하다.

일시 석방자들은 당연히 보호소로 돌아가는 게 꺼림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화성보호소에서 새우깡기 고문을 당한 난민 신청자 M 씨는 많은 일시 석방자들이 다시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마중’에 따르면 200여 명이던 화성보호소의 수용 인원은 한때 30여 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100여 명까지 늘었다 한다. 다른 보호 시설 등으로

분산 수용됐다가 돌려보내진 인원도 있겠지만 석방됐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석방자들은 끔찍한 보호소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심사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출국

‘마중’의 한 활동가는 자신이 연락하던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가 두 번이나 석방 기한 연장이 거부되자 결국 제3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제3국에서의 삶도 불안정하겠지만 보호소에 구금되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 것이다.

일시 석방 기간 중 코로나19에 걸린 난민 신청자도 있다고 한다. 그는 석방 기한 만료 하루 전에야 격리 기간이 끝났고 석방 기한 만료일에도 계속 아팠지만,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에 출석해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라고 고집했다.

아마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서 그랬을 것이다. 결국 ‘마중’ 활동가가 대신 출석해서 겨우 한 달을 연장받았다.

확진자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4일이던 격리 기간을 정부가 사실상 임의로 7일로 단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석방자 재구금이 보호소 내 감염 확산의 경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근 정부는 방역을 크게 완화하고 사실상 감염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경기 둔화, 즉 기업들의 이윤 획득을 걱정하는 조치다.

보호소 측이 집단감염 재발 가능성이 큰데도 재구금을 고집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건강과 권리 보장보다는 강압적 통제에 더 골몰하기 때문이다.

석방된 이주민들을 다시 구금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구금된 사람들도 모두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임준형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하는 [주말 pick] /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4

바이든의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로 반긴다. 그러나 대다수 흑인의 삶은 그대로다

최근 미국에서 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청문회가 끝났다. 그가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다. 올해 초 고령의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가 은퇴하자 바이든은 자신의 공약대로 흑인 여성을 지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 사법 기관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쳐 놓은 기능을 한다. 대법관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종신직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 낙태권, 총기 규제, 동성 결혼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관의 임명은 언제나 정쟁의 대상이 돼 왔다.

현재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6명과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대법관이 돼도 보수 우위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될 거라는 점 때문에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789년 이래 미국 연방대법관 115명 중 유색인종은 3명, 여성은 5명에 불과했다.

미국 연방 판사로 재직하던 흑인 여성의 비율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2퍼센트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2021년 기준 미국의 흑인 변호사는 4.7퍼센트밖에 안 된다. 흑인 여성 변호사는 고작 2퍼센트이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낙태권을 지지하고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여러 문제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했다. 연방대법관에게는 이례적인 국선변호인 경력도 있다.

그래서 그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은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흑인의 90퍼센트가 흑인 여성 대법관의 탄생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의 지명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남긴 퇴적물의 일부이다. 2020년 대중적으로 분출한 이 운동은 평등에 대한 피차별 대중의 염원을 보여 줬고, 이것이 연방대법원 같은 고위 국가기구 내에도 작게나마 변화가 반영될 여지를 만든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예컨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 1960년대 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거대한 반란 이후 공직에 진출한 흑인의 수가 크게 늘었다. 1969년과 비교해 1975년에는 그 수가 3배가 됐다(1125명에서 3509명).

인종차별적 우파인 공화당의 다수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바이든의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예고에 공화당 미시시피주 상원의원 로저 위커는 “[없어져야 할] 우대 조치의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냉소했다.

반면, 전 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ACP), 전미여성기구(NOW), 휴먼라이츠캠페인(HRC) 등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권 단체들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지지하며 상원 통과를 촉구했다.

이면

흑인 여성 대법관의 탄생은 이렇듯 평등에 대한 피차별 대중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의 지명을 환영한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번 지명을 이용해 피차별자들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한다. 개혁 염원 배신으로 바이든은 현재 임기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번 대법관 지명을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가 바이든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지금 은퇴한 것이라

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은 여성·유색인종·성소수자를 등용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다양한 내각”을 자랑해 왔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진보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와 같은 좌파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개혁 지향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다.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해리스는 검사 출신으로 경찰 단속 강화와 (흑인을 훨씬 많이 수감시키는) 현재의 사법제도를 옹호한 전력이 있고, 상원의원 재임 시절 낙태 시술 재정 지원에 반대표를 던지고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을 지지했다.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지원하고 모술에서 전쟁 범죄로 유명한 이라크 보안군 훈련을 도운 전직 군장성이다.

물론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앞서 지적했듯이 몇몇 문제에서 진보적 판결을 했다.

여전한 인종차별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경찰의 인종차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또 한 명의 흑인이 경찰에게 살해됐다. 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에 총을 쏘 두 명을 살해한 극우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수의 여성·흑인·성소수자가 고

위직에 진출한다고 해서, 평범한 대다수 여성·흑인·성소수자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까지 했던 나라에서, 여전히 흑인은 백인보다 5배 이상 많이 수감되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경찰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계급으로 나뉘어 있고, 국가는 지배계급을 지키기 위한 기구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종종 자신과 같은 차별받는 집단의 다수(노동계급)를 배신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 하나가 1991년에 임명돼 현재에도 대법관인 클라런스 토머스다. 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흑인 대법관이 됐지만, 소수인종 우대 조치를 반대하고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추방을 유예하는 법도 폐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고위직에 오른 일부 사람과 민주당이 피차별 대중에게 개혁을 선사할 수는 없다. 진정한 진보적 판결과 입법은 언제나 평등을 요구하는 흑인·여성·성소수자·노동자·이민자 등 피차별 대중의 투쟁 덕분에 가능했다. 권력자들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투쟁이 강제한 것이다. 노동계급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대중 투쟁을 벌일 때만 실제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

성지현

추천 책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차승일 옮김, 156쪽, 8,000원, 책갈피

계급, 소외, 차별 —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 외 지음, 편집부 엮음, 344쪽, 15,000원, 책갈피



3월 3일,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패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인 상황에서 곧장 법 개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후퇴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산재 기업 면죄부 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악되면 산재 사업장 사용자들이 더 쉽게 면죄부를 받을 것이고,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윤석열의 추가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

사용자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후 실행까지 1년 동안 사용자들이 예방을 위해 한 것은 없다.

2021년에는 2080명(사고 사망 828명, 질병 사망 125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20년 2062명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질병 사망은 2020년보다 72명 늘어나, 2004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만 해도 무려 노동자 42명이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더 후퇴시키자는 건 적반하장이다.

또 솜방망이 처벌 반복되는가

윤석열이 당선하고 개악에 시동을 걸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두성산업(경남 창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과정에서 유독성 세척액을 사용하면서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

아 무려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됐다.

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의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조사에 잘 응했기에 구속영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즉각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구속영장은 처벌 수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또, 투쟁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손쉽게 구속되는 사례들을 보면 계급 차별적인 사용자 봐주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개악을 막으리라 믿어선 안 돼

한편, 민주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물

러나지 않겠다며 윤석열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원안의 알맹이를 빼고,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며 또 한 번 후퇴시킨 당사자들이다.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든 책임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사용자들이 안전 문제에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은 까닭은 문재인 정부가 법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마저도 더 후퇴시켜서 사용자들의 걱정을 대폭 덜어 주려 한다.

개악을 막을 힘은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에서 나올 수 있다. 또한 법안 후퇴만이 아니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층의 투쟁이 강력해져야 한다.

양효영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북한은 왜 미사일을 쏘을까?

— 격화되는 국제 갈등과 한반도

4월 7일(목)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40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